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및 대책

모선희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원칙 하에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가족부양의 한계, 사회복지의 발전, 노인육구의 다양성 등 사회적 환경과 가족의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05년 4월 26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고령사회 정책으로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최근 노인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의 주요 방향은 크게 장기요양보호와 노인인력활용이다.

지속적인 저출산 추이와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으로 노인부양비의 급증,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부족문제가 제기되면서 건강하고 직장 경험을 갖춘 노인 인구층을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3년 노인인력운영사업단을 발족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계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법규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모색하였고, 2004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전담기구로 노인인력운영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의 노인인력지원기관(CSC),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20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② 한편 노인의 가족부양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회적 부양의 필요성이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면서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노인부양·보호를 위한 시설, 인력,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빠르면 2007년부터 일본의 개호보험과 흡사한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 사회 및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접근,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변화에

다른 다양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래의 노인 계층은 교육 및 경제수준의 향상, 의료보건 기술의 발전 등으로 건강하면서 활력있게 살기를 희망하는 (Active aging) 노인이 증가할 것이다.

노인의 욕구는 건강과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장기요양보호 욕구가, 건강하고 저소득의 노인은 경제활동 욕구가,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은 여가 및 교육 등 사회참여의 욕구가 높을 것이므로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재정, 인력 등의 부족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주로 경로연금과 시설보호에 집중), 앞으로는 노인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노인문제는 노인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의 재정과 인력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역사회 등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노인의 가족 및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Aging in Place의 개념이 중요시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한편 국가의 노인복지정책도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노인의 복지요구

를 반영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005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업이(노인복지 포함) 지방으로 이양되어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지원의 차별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